

공익신고, 5년간 2만건 책임감면 2건뿐

국가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낙제점 지적... 김관영 의원 “책임감면” 특례 확대·활성화 필요

사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를 독려하는 가운데 정작 이를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행정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조차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에 따른 ‘책임감면’ 실적 미미하고, 해당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2011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처리 공익신고가 23,179건에 달하며 이 중 보호조치는 34건에 불과했다. 인용률이 약 30%에 불과하며, 전체 공익신고자 중에서는 0.15%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실적이다.

보호조치, 신변보호부터 재판에 회부된 경우의 책임감면까지 다양한 보호요청이 있는 가운데 단순 보호조치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신분공개 확인 요청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호조치 성적이 저조한데 대해 권익위 담당자는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요청이 애시 당초 적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에 회부될 경우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책임감면’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은 실적을 조사한 결과 2013년 이후 단 9차례 안내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호조치 신



신임 대사들에게 인사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대사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을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 신고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문책했다. 실제로 국가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위해 사법부에 책임감면 요청 업무 협조 요청을 지원 받은 신고자는 동기간 2명에 그쳤다. 그나마도 국가권익위는 사법부가

인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수동적인 행정서비스가 공익신고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인 권익위가 부패를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향후 공익신고자의 독려를 위해 책임 있고, 광복의 신고자 지원 방안과 적극적인 안내와 실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지금처럼 공익신고만 받고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고 전·후 확실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유명무실

최근 10명 중 3명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3,063,000개(2014년 기준) 중 928,000여개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 20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그 운영실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상담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 유형별 상담 실적은 일반불공정 86건, 가맹사업 110건, 하도급 28건, 대규모유통업 7건, 약관 23건, 상가 임대차 등 기타 147건으로 총 40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위에서 밝힌 928,000여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0.04%로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실적이다.

또한, 상담센터를 위한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 2018년도 내년 정부예산(안)은 4억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이 작은 예산 속에는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사실상 ‘피해 상담센터’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배숙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공단은 피해상담센터를 위한 별도의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운영 중에 있는 각 지역 59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안에 간판만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담당인력 또한 각 센터 당 단 1명뿐이다.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년도 예산(안) 소진기금 감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예측되는 부작용 등으로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동반성장과 상생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처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안전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은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인력 확보 등의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담기구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이번 주말 촛불 1주년 집회, 광화문-여의도로 갈라지나

퇴진행동, 광화문 행사 “청와대 행진”... 여의도 촛불, 시민 자발적 행사 “보수 세력 등에 빌미만 제공”

직장인 이모(29)씨는 지난 겨울 대부분의 주말을 광화문 일대에서 보냈다. 이씨는 28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했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엔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로 향한다.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이 여의도에서 촛불 1주년 기념 피티를 벌인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25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말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 두 군데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화문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가 주최하는 행사다. 여의도는 특정 집단이 아닌 개인이 집회 신고를 했다.

중진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이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다 지난해 집회 장소인 광화문에서 행사를 벌일 계획인 만큼 대다수 참가자들은 광화문에 모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은 시민단체나 노동계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가 아닌 여의도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1주년 기념 촛불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갈라지는 모양새다.

이들이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택한 이유는 퇴진행동 측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다. 현재 퇴진행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들을 비판하는 댓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퇴진행동 측이 반기를 드는 시민들은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기존 진보세력들이 출범 5개월밖에 안 된 정부를 흔들고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입진보’들이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보수 세력 등에게 트집잡힐 빌미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입진보란 최근 대중들이 실속 없이 목소리만 크며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데 쓰는 용어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의 아이디인 ‘여의도 촛불’은 청와대가 아닌 야당을 향해 적폐청산시위를 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현실화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과 야당 당사들이 모여있는 여의도에서 ‘촛불피티’를 할 예정이다. 조직적 행사가 아닌 만큼 이들은 현재

피티를 여는 데 도움을 줄 인력을 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집회가 일부 단체의 선전 무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가 나름 ‘전시’ 상황이였다면 이번 1주년 집회는 ‘행시’라는 점이 조직화된 시민사회와 소속이 없는 일반 시민 간 입장차가 생긴 이유다.

한편, 안전길 참여연대 사무처장(퇴진행동 측)은 “승리를 재현하고 다시 한번 국민이 이겼음을 엄중히 알리는 행사인데 문 대통령을 비판하러 가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행진 코스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오해가 커진 만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차정부 보수단체 지원 100억대...삼성·현대 동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대기업에 압박해 특정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 단체를 지원하게 한 것이 범죄 핵심”이라며 “관계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장충기 전 사장을 소환하는 등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를 지원한 사실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당초 파악했던 보수단체 지원금 68억원 외에도 기업이 별도로 보수단체에 지원한 돈이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보수단체 지원액이 어렵잡아도 1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검찰은 전날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러 배경조사를 벌였다. /뉴시스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화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주최: 전라북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주관: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실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의 만남 -10.28(토) 호암 중점용 / 11.11(토) 한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갤러리 R (로비)	
나도 서예가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감암서예관	감암 송성윤전	